

# 준공 즉시 투입... 지방 투자사 인력난 해소된다

산업부 '퀵스타트 프로그램'  
2개 사 선정... 총 예산 10억  
지자체 등과 컨소시엄 구성

정부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현행 세제·입지·현금 등 인센티브 제공에 이어 초기 인력난 해소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방에 공장을 짓고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이 지연되는 지방 투자기업의 애로 해소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공장 신·증설을 앞둔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이란 지방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기업이 공장 준공 이전인 공장을 건설하는 기간 동안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모집해 교육하고, 공장 준공과 동시에 인력을 투입해 공장이 적기 가동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방투자기업은 지자체, 산학융합

원, 교육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약 한 달간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례 조사에 따르면, 초기 인력난으로 공장의 100% 가동이 지연된 기업의 경우, 약 1~3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수도권 14개사 대상 조사에서, 13개사는 필요인력 대비 평균 21.5%의 인력 미충원이 발생해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었다.

A 기업의 경우 지방 공장 준공시점에 필요한 신규인력 대비 지역 내 인력 채용만은 역부족으로 판단, 사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 중이나, 이것도 여의치 않다. B 기업도 공장 준공에 맞춰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했지만, 인력 부족과 기업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미충원이 발생했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인력 애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미국

조지아주의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산업부는 연두 업무모고에서 지방투자기업의 적기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지아주의 경우 경제개발 프로그램 중 하나로 1967년부터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주정부는 기업이 조지아주에 투자하는 것을 결정함과 동시에, 주정부가 인력 모집부터 교육 프로그램 설계·운영까지 기업과 함께 논의하고 협업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데, 모든 비용은 주정부가 부담한다.

조지아주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유치했다. 우리나라의 기아자동차, SK 이노베이션 등도 조지아주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 인력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가 기획한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의 올해 시범사업은 2개의 지방투자기업을 선정해 채용후보자 모

집, 맞춤형 교육 등에 총 예산 1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선정 기업은 지자체, 산학융합원 등의 도움을 받아 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지역 대학 등을 통해 특화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채용후보자로 선발된 인력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 동안 월 200만원의 교육훈련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해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라며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이 세제, 입지, 현금 등 현행 인센티브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지방투자 유인책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완해,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의 시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국여성벤처협회 오세현 상근부회장(왼쪽)이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박철한 센터장과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벤협

## 여벤협-전경련중소협력센터

### 여성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여성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추가로 나선다.

7일 여벤협에 따르면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업 경영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여성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대상으로 비즈니스 분야별 전문위원을 매칭해 심층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 예비창업자 기술 및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여성 벤처기업 분야별 맞춤형 경영자문 및 교육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 홍보, 유망기업 발굴 등을 위한 인프라 활용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여벤협 오세현 상근부회장은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력을 가진 여성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이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의 경영 교육 및 자문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연계지원을 통해 여성벤처기업들이 성장하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천원의 아침밥' 3배 확대... 104개 대학 추가 모집

145개 대학서 234만명 수혜 받아  
농식품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키로

대학생들이 1000원을 내고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가 당초보다 3배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을 2차 추가 모집한 결과 총 145개 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저렴하게 제공해 청년층의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잉여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식품부가 학생 1인당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은 1000원만 내면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0일 41개 대학 68만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2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대학교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이 생활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2일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다. /뉴시스

키로 했으나, 호응이 높은 것을 감안 '쌀 수급 안정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고, 2차 추가모집 기간을 2주간 연장한 결과 마감일까지 전국 104개 대학이 신규 신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업 운영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부적격 대학은 없었고, 신규 신청 대학 모두를 선정키로 했다. 이에 기존 41개 대학을 포

함해 최종 145개 대학은 사업 마무리 시점인 11월 말까지 제출한 운영 계획에 맞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천원의 아침밥' 수혜 대상은 처음 68만여명에서 234만명으로 3배 이상 커졌다.

농식품부는 대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15개 시·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사업 참여 대학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참여 대학은 수도권 55개교, 비수도권 90개교가 선정돼 참여하는 만큼 농식품부는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교육부도 올해부터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 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집행 기준 규제를 완화, 사업 선정 대학이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는 더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지자체 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희문 전무(왼쪽)가 세계전자협회 김대환 회장과 'e-모빌리티 산업 발전 및 회원사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 중견련

### e-모빌리티 분야 발굴·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e-모빌리티 분야 중견기업들의 성장장 동력을 발굴하고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7일 중견련에 따르면 지난 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제전자자동차엑스포 사무국과 공동으로 '2023년 중견기업 NEXTAGE'를 개최했다.

중견련이 지난해 주도해 출범한 'NEXTAGE'는 중견기업·스타트업·기관 간 협업 플랫폼으로 올해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제10회 국제전자자동차엑스포' 일환으로 열렸다.

올해 'NEXTAGE'는 국내 e-모빌리티 산업 발전 및 회원사 협력 확대를 위한 '중견련·세계전자협회 업무협약', 'e-모빌리티 산업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 전문가 발표 등으로 꾸러졌다.

중견련과 세계전자협회는 국제전자자동차엑스포 등 e-모빌리티 분야 중견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 확대 기반 강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토즈스터디카페 가맹본부, 점주에 버팀목자금 배분 강요

39개 사업자서 총 1995만원 받아  
공정위, 향후행위금지 명령 부과

토즈스터디카페와 토즈스터디센터 등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된 정부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7일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1995만원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토즈스터디센터 공동투자 가맹점에게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해 총 39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총 1995만원을 받았다.

2001년 설립한 피투피시스템즈는 토즈스터디센터(독서실), 토즈(회의실), 토즈스터디카페(스터디카페), 토즈스터디랩(독서실), 패스트카페(무인카페)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82개 가맹점과 3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

며, 2020년 기준 매출액은 68억9200만원이다.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독서실과 같이 코로나19로 영업제한과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직후 '공동투자 가맹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를 배포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명목 지원금 100만원을 운영계좌에 넣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들이 반발하자 피투피시스템즈는 재차 수령 가이드를 배포하면서 가맹점사업자와 투자계약에 의거해 개별적으로 협의할 것임을 공지했다.

투자계약에 따르면, 투자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피투피시스템즈는 자신의 투자금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위약벌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에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 등 3가지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했다.

/세종=한용수 기자